

ASAN REPORT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여론연구프로그램

2015년 1월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여론연구프로그램 | 2015년 1월

1	2	3	1 제2호 땅굴 발견 1975.3.30 ©연합뉴스
4	5	6	2 버마 아웅산 참사현장 1983.10.13 ©연합뉴스
			3 87년 김포공항에서 압송되는 김현희 2009.3.11 ©연합뉴스
			4 소 500마리를 싣고 판문점을 통과해 북으로 가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1998.6.16 ©조선일보
			5 열싸안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9.8.18 ©연합뉴스
			6 평양 가족 상봉 2000.11.30 ©연합뉴스
			7 수면위로 올라온 천안함 함수 2010.4.24 ©연합뉴스
			8 연평도 포격 현장 2010.10.16 ©국방부 flickr
			9 통일준비위원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2014.8.7 ©연합뉴스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 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 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김찬규, 안지윤 인턴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자

김 지 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조사연구, 2011),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한국정치학회보, 2011),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Political Studies*, 2010),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 충 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 의 철

이의철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아산 데일리 폴’과 ‘아산 연례조사’ 등 여론조사 실무와 분석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여론조사, 국내정치, 선거연구 등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칼 프리드호프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위튼버그 대학교(Wittenberg University)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계경제연구원(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에서 연구원을 거쳤고, 코리아헤럴드와 중앙일보 등의 매체에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목차

요약 09

들어가며 12

1. 한국인의 대북인식 13

 (1) 북한과 북한 주민인식 13

 (2) 남북관계에 대한 무관심 17

2.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19

 (1) 대북정책 평가 19

 (2)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22

 (3)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23

3. 한국인의 통일 인식 24

 (1) 통일에 대한 관심 24

 (2) 통일에 대한 접근법: 민족의식 대(對) 경제효과 26

 (3) 통일에 대한 민족의식 약화: 시기별 변화 29

 (4) 통일에 대한 우려: 경제적 부담 30

나가며 33

부록 35

그림

[그림 1] 북한의 이미지 13

[그림 2] 북한·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도 14

[그림 3] 주변국 국민에 대한 친밀감 15

[그림 4] 세대별 북한 주민에 대한 친밀감 16

[그림 5] 남북 차이 발생 원인 16

[그림 6] 한국사회 주요이슈 17

[그림 7] 주변국 관계 평가 및 전망 19

[그림 8] 대북정책 만족도 20

[그림 9]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 21

[그림 10]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22

[그림 11] 북한의 경제지원 요구를 가정한 이산가족 상봉 23

[그림 12]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24

[그림 13] 통일에 대한 관심 25

[그림 14] 통일이 필요한 이유 27

[그림 15] 통일이 필요한 이유: 민족의식 대(對) 경제효과 28

[그림 16] 시기별 민족의식 관점에서의 통일 필요성 29

[그림 17] 통일의 시급성 31

[그림 18] 증세에 대한 의견: 조세저항 33

표

[표 1] 세대별 통일에 대한 무관심 26

[표 2] 세대별 통일이 필요한 이유: 민족의식 30

요약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지난해 초부터 언론에 회자되며, 북한·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월 초에는 아시안 게임 폐막에 맞춰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한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북선전 전단지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10월 말로 예정되었던 2차 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북한’하면 떠오르는 것: 전쟁·군사·핵무기 37.5%)이 한국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은 56.0%로 북한(67.0%) 자체 보다 낮았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동일한 경향성은 북한 주민에 대한 친밀감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인의 북한 주민에 대한 친밀감은 평균 5.47점(0점 ‘매우 멀게 느낌’, 10점 ‘매우 가깝게 느낌’)으로 미국인(6.25점), 중국인(5.55점) 보다 낮았다. 이 조사결과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시각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은 남북관계에도 무관심했다. 남북관계 및 안보에 대한 관심은 북핵사태,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76.5%나 되었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라는 의견이 43.3%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한국인은 지난해 10월 32.2%에 그쳤고, 불만족 의견은 47.7%로 절반에 육박했다. 불만족은 30대(62.7%), 40대(60.2%), 20대(50.3%)의 순으로 높았고, 50대(41.8%)와 60세 이상(24.6%)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현재 처럼 유지해야 한다”와 “더 강경해야 한다”가 각각 23.9%, 22.2%로 강경노선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대북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1.2%로 압도적이었다.

남북간 현안 즉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44.4%가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일반 대중이 5.24 조치 자체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정치 분야인 금강산 관광 재개(63.1%), 이산가족 상봉(72.0%)에 대한 지지는 높았다. 또 한국인의 81.7%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답답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두 정상 만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북한,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일인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임에도, 통일에 대한 관심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줄곧 80% 초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유독 20대는 통일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무관심은 올해 28.2%로 50대(10.1%), 60세 이상(8.3%)보다 3배 또는 그 이상 높았다.

한국인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민족동질성 회복과 경제효과를 들었다. 같은 민족이라서(32.2%), 이산가족문제 해결(7.6%)의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제성장(23.0%), 분담비용 감축(14.7%)을 합한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과 비슷했다. 50대 이상이 여전히 민족의식(같은 민족+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이유로 통일 필요성에 공감한 것과 달리, 20~40대는 경제효과(경제성장+분담비용 감축) 즉 현실적 관점에서 통일을 봤다.

통일에 대한 민족의식은 약해지고 있었다. 민족의식의 관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2007년 59.5%, 2008년 64.7%에서 2014년 40.8%로 톱 떨어졌다. 민족의식 약화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났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비교적 민족의식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봤던 노년층의 의식 약화도 유의할 만하다(2007년 대비 하락(%), 40대: 22.2%, 50대: 31.8%, 60세 이상: 24.0%).

통일 이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컸다. 경제가 나빠져도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답은 45.5%였다. 앞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이 86.6%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수가 판단을 바꾼 것이다. 통일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세금부담 의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통일세에 찬성한 비율은 48.1%로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한국인의 비율(86.6%)에 미치지 못했다. 통일세에 대한 거부감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50대(28.8%)와 60세 이상(28.7%)은 저항이 낮은 반면, 30대(57.7%)와 20대(54.4%)는 절반 이상이 통일세에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한 한국인의 통일인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50대 이상은 민족동질성 회복, 2040세대는 경제적 편익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정상회담에서 찾은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을 되풀이 했다. 지난 10월 말 무산된 남북 고위급회담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4일 북한 고위급 3인의 깜짝 방문 때만 해도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해빙 무드는 일주일을 가지 못했다. 10월 7일 북한 경비정 NLL 침범에 따른 남북교전, 10일에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군의 대공 기관총 충격이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는 발전과 갈등을 반복했다. 남북은 1971년 이래 두 차례의 정상 회담을 포함해 총 635회의 회담을 가졌다. 남북교역량도 65배나 늘었다. 교류를 시작한 1989년 1,600만 달러에서 2013년 10억 3,600만 달러가 됐다.¹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2000년대 초에는 화해무드가 조성됐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섰다.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는 세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또 북에 의한 잠수함 침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점차 악화됐다. 특히, 5.24 조치는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개소 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2013년 4월 문을 닫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통일대박론’이었다. 대통령은 201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일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끊임없이 회자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최근까지도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 효용성과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는지는 의문이다.

통일정책 입안·추진에 있어, 우리 정부는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

1. 남북회담본부. 회담통계. <http://dialogue.unikorea.go.kr/home/talk/statistics/list>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남북 교역액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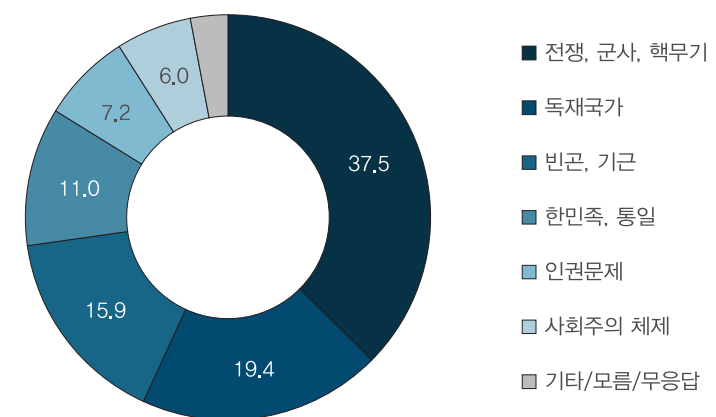
에 답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그 대상인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2014년 9월 4~6일, 7~1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와 10월 초 남북고위급 회담 직후인 10월 6~8일 실시한 조사자료를 이용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핀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대북인식,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 등에 주목했다.

1. 한국인의 대북인식

(1) 북한과 북한 주민인식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널리 퍼져 있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하면 첫째로 전쟁·군사·핵무기(37.5%), 둘째로 독재국가(19.4%)를 떠올렸다. “빈곤이나 기근”이 떠오른다는 응답자도 15.9%였다. 반대로 한민족과 통일을 떠올린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분단이 60년 동안 이어지면서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전 세대가 공유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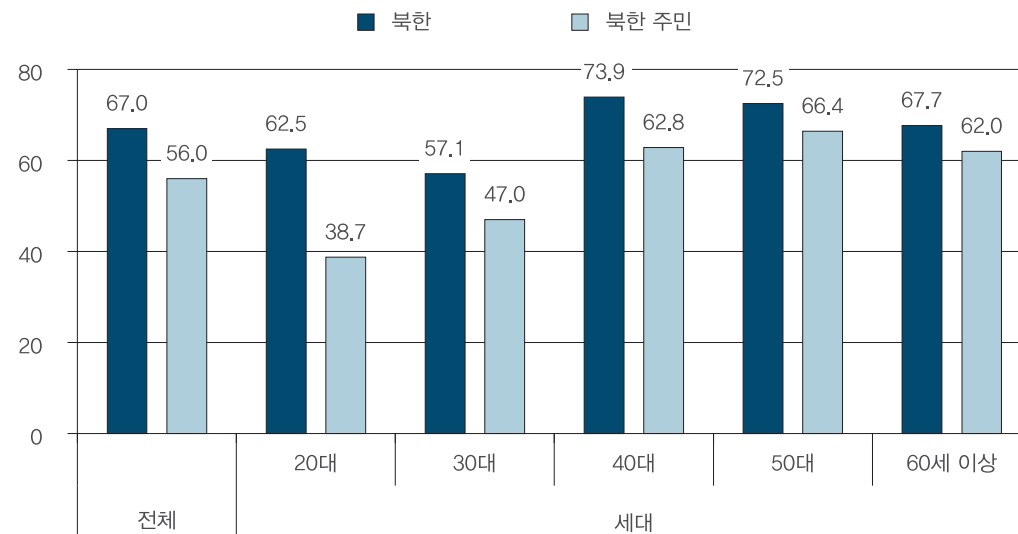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이미지² (단위: %)



2. 출처: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9월 4~6일)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보기보다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은 것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평소 북한과 북한 주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각각 질문한 결과, “북한 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56.0%로 “북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67.0%)보다 1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차이는 20대에서 가장 컸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에 관심 있다”는 20대는 62.5%였으나 “북한 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20대는 38.7%에 불과했다. 20대의 상당수는 북한과의 군사대치, 안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2] 북한·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도³ (단위: %)



유사한 결과는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 중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문제를 묻은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62.6%, “인권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였다.⁴ 북한발(發) 안보 위협이 해소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이상 북한 인권문제나 인도적 지원은 부차적 문제라고 여긴 것이다.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채택,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립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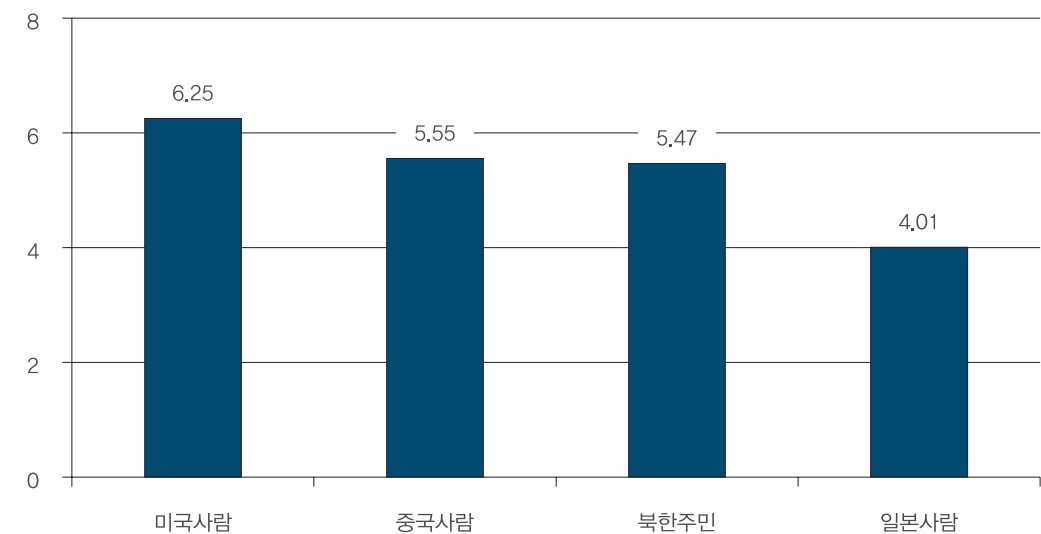
3. 출처: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9월 7~10일)

4. 출처: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6월 7~9일)

굵직한 뉴스가 있었어도 국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외면 받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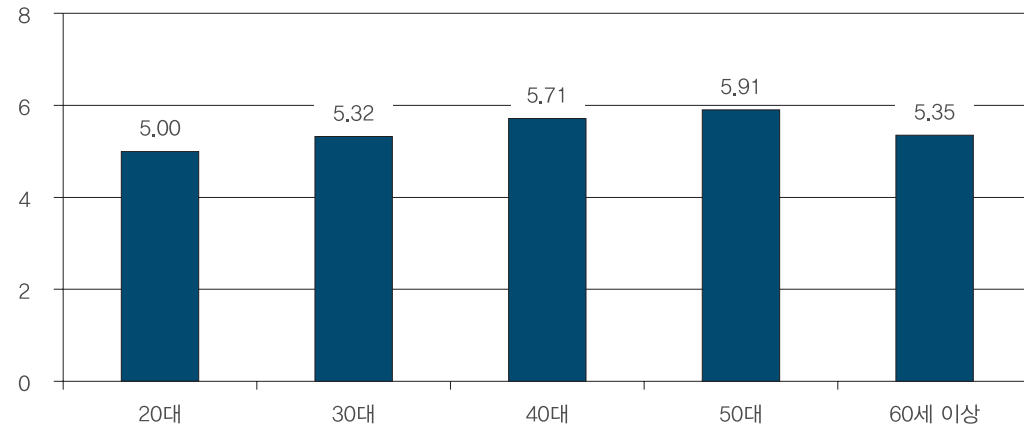
또 한국인의 주변국 국민 친밀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나타났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4개국 국민에 대한 친밀감을 0점 ‘매우 멀게 느낌’, 10점 ‘매우 가깝게 느낌’의 척도로 측정했다. 그 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친밀감은 미국인과 중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에 대한 친밀감은 6.2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평균 5.47점으로 중국인(5.55점) 보다 소폭 낮았다. 일본인에 대한 친밀감은 4.01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현재 교착상태인 한일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주변국 국민에 대한 친밀감⁶ (단위: 0점 매우 멀게 느낌~10점 매우 가깝게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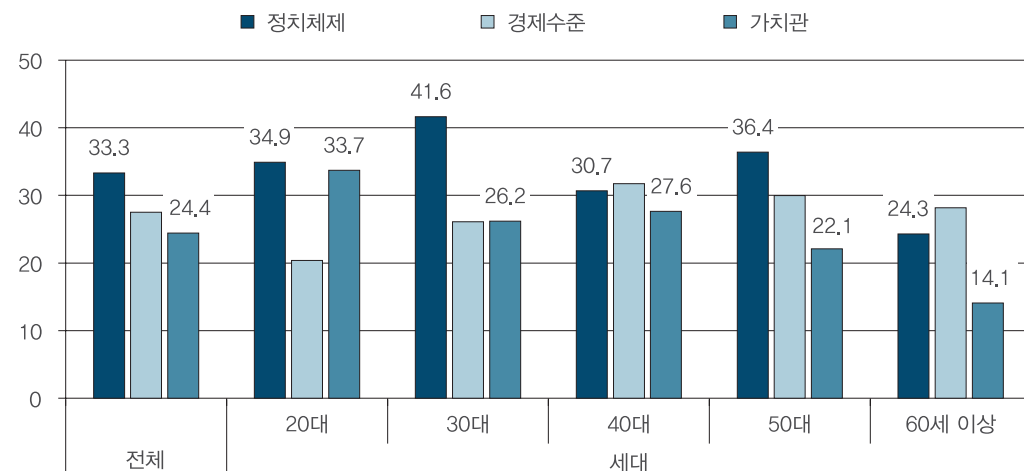


5.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인도적 지원, 대북제재로 나뉠 수 있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책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 대한 여론의 인식은 인도적 지원으로 해석했다.

6. 출처: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9월 7~10일)

[그림 4] 세대별 북한 주민에 대한 친밀감⁷ (단위: 0점 매우 멀게 느낌~10점 매우 가깝게 느낌)

북한 주민을 가장 멀게 느낀 세대는 20대였다. 20대의 북한 주민 친밀감 평균은 5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50대는 가장 가깝게 느낀 세대였다. 젊은 세대가 북한 주민과의 민족 정체성, 혹은 동질감을 잃어가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5] 남북 차이 발생 원인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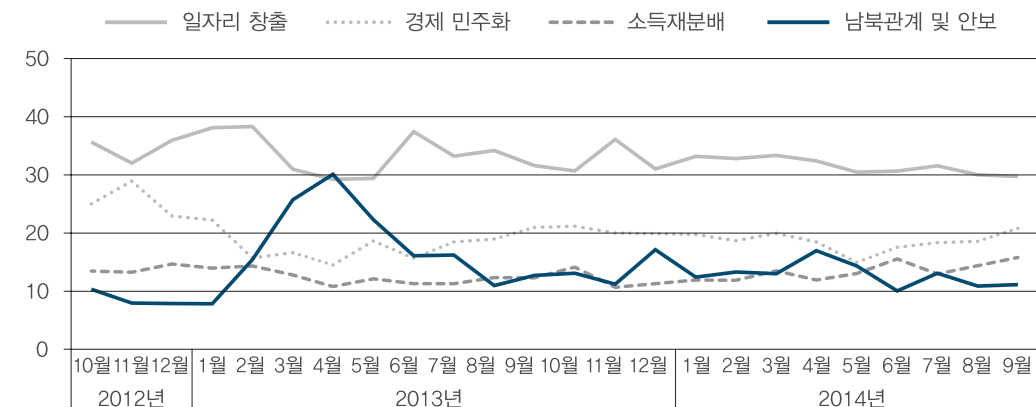
7. 출처: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9월 7~10일)

8. 출처: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9월 7~10일)

남북간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물었을 때, 1위 정치체제(33.3%), 2위 경제수준(27.5%), 3위가 가치관(24.4%)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세대마다 남북간 차이의 근원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랐는데, 30대는 정치체제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봤고(41.6%), 40대는 경제적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봤다(31.7%). 20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북한과 가치관 차이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33.7%로 유독 높았다. “가치관 차이가 남북 차이의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30대 26.2%, 40대 27.6%였고,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각각 22.1%, 14.1%로 그 비율이 줄었다. 20~40대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의 격차뿐 아니라, 가치관 차이도 심각하다고 여기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은 통일 이후 나타날 가치관 혼란의 문제를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남북관계에 대한 무관심

약화되는 민족동질감이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문제지만,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다. 한국사회 주요이슈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북한이 안보를 위협할 때에만 남북관계에 관심을 보였다.

[그림 6] 한국사회 주요이슈⁹ (단위: %)

9. 한국사회 주요이슈는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소득재분배, 남북관계 및 안보, 교육, 민주주의 발전으로 나뉘어 매달 물어봤다. 교육, 민주주의 발전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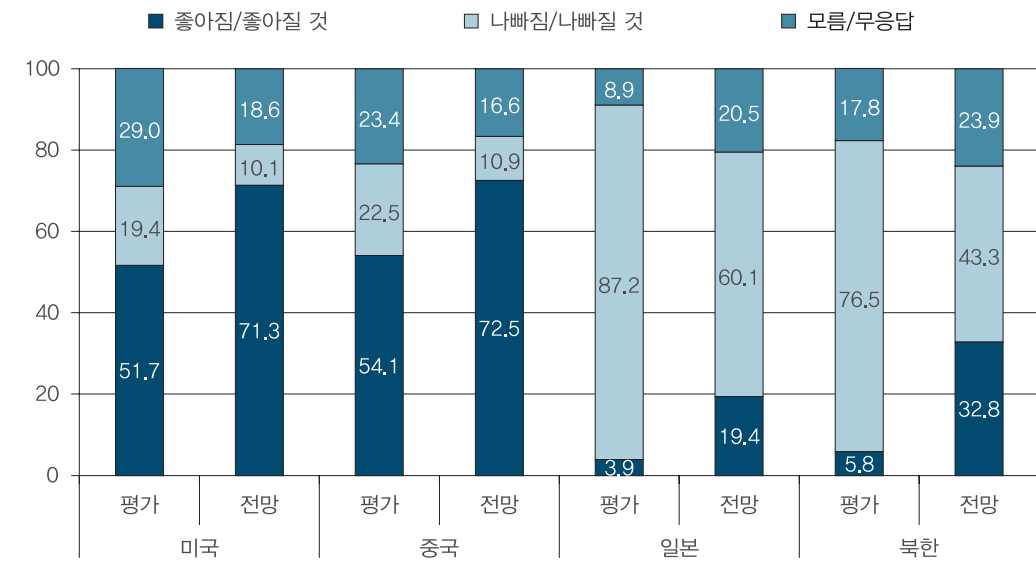
출처: 아산데일리폴(2012~2014년)

[그림 6]은 한국사회 주요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다. 한국인이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에 관심을 표한 것은 지난 2년간 단 3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다. 당시는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이 처음으로 가동 중단되는 등 남북 대치가 극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2013년 4월 “남북문제가 최대 이슈”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0%에 육박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6월에는 이 비율이 반 토막 나며 16%로 떨어졌다. 북핵 문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북핵 사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응답자들은 “경제 활성화와 분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2014년 말에도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비율은 10% 초반에 머물러 있다.

다른 난관도 있다. 한국인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실망하고 있었다([그림 7] 참조). 많은 이들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 2014년 1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각국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과반의 한국인이 미국, 중국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다. 반면, 일본과는 87.2%가, 북한과는 76.5%가 관계가 나빠졌다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비율은 32.8%에 그쳤다. 나빠질 것으로 본 비율은 43.3%로 이보다 높았다. 한미·한중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비율이 각각 71.3%, 72.5%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한 한국인의 전망은 어두웠다.¹⁰

10. 지난해 10월 아시안게임 직후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다소 높아졌다. 회담직후 실시한 조사결과(조사기간: 2014년 10월 6~8일)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비율은 51.3%, 나빠질 것으로 본 비율은 30.5%였다. 일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10월말 예정되었던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면서 한국인의 남북관계 전망은 다시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주변국 관계 평가 및 전망¹¹ (단위: %)



2.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만큼 대북정책 및 통일에 대한 시각도 변화했다. 아래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동향을 살펴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정책 전반, 대북 경제지원,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물었다.

(1) 대북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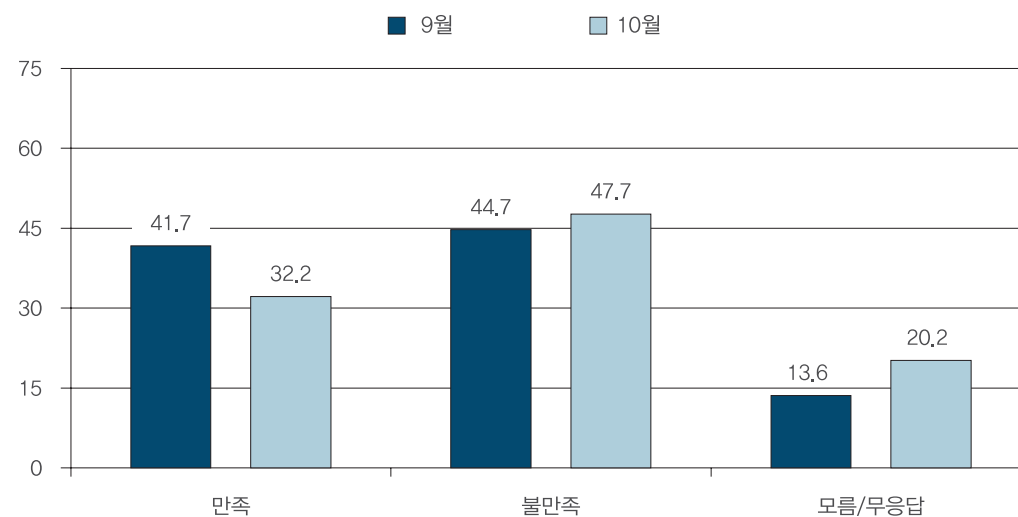
지난해 7월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또 10월 말부터는 통일의 경제효과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냉담했다. 10월 조사결과 응답자의 32.2%만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

11. 출처: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1월 4~6일)

답은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평가를 유보(모름/무응답)한 비율도 20.2%나 되었다.

10월 초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지만, 국민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9월 41.7%에서 10월 32.2%로 오히려 감소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만 대북정책 만족도가 줄어든 것이다.¹² 이는 회담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한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¹³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9월 44.7%에서 10월 47.7%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유지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났다. 30대(62.7%), 40대(60.2%), 20대(50.3%)의 순으로 높았고, 50대(41.8%)와 60세 이상(24.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40대를 기준으로 엇갈렸다. 이는 세대별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8] 대북정책 만족도¹⁴ (단위: %)



12. 10월 조사가 남북고위급회담 직후인 10월 6~8일에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2차 고위급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은 반영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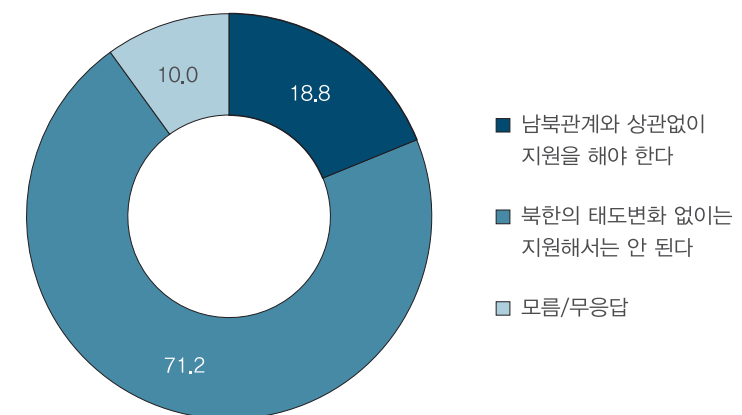
13.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한국인은 남성(4.0%)에 비해 여성(9.2%), 다른 세대보다 20대(11.0%)와 60세 이상(10.3%)에서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다(괄호 안의 수치는 '모름/무응답'의 변화량).

14.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10월 6~8일)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유화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37.3%였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23.9%)와 “강경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22.2%)의 순이었다. 이 응답에 대한 결과 해석에 앞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평가(‘매우 유화’ 0, ‘보통이다’ 5, ‘매우 강경’ 10)를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5.71점으로 이명박 정부(5.79점) 보다 낮았지만, 여전히 강경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됐다.¹⁵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 전후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월 29%에서 10월 23.9%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대북 경제지원에 있어서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북지원에 앞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9월 67.8%, 10월 71.2%로 남북고위급회담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인의 상당수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기 전에는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대북지원은 여전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림 9]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¹⁶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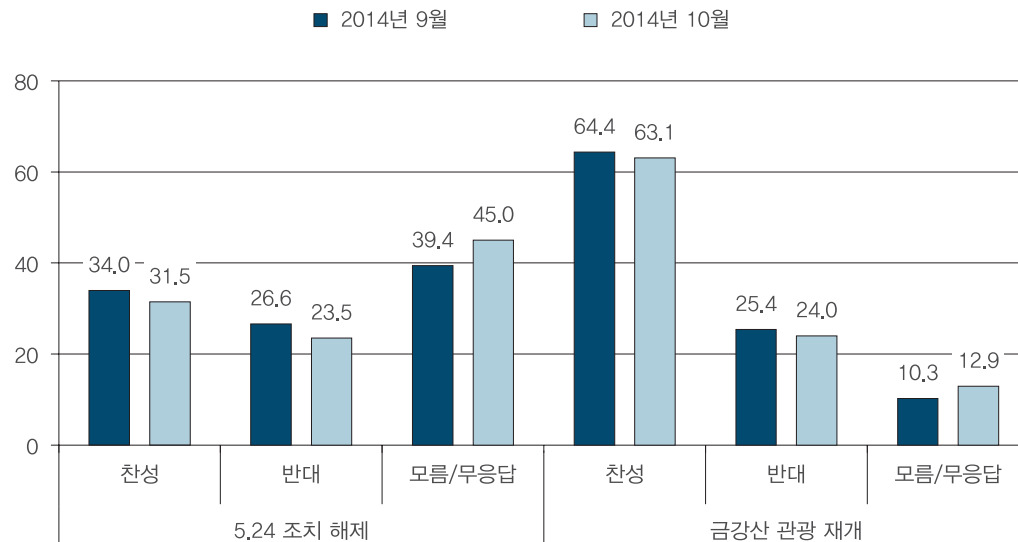
15.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평가는 각각 3.71점, 3.26점으로 ‘유화적’에 가까웠다.

16.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10월 6~8일)

(2)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지난 10월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남북은 5.24 조치 해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의 비정치분야 사안도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부상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 방한을 전후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두 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은 북한 실세 3인의 방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¹⁷

[그림 10]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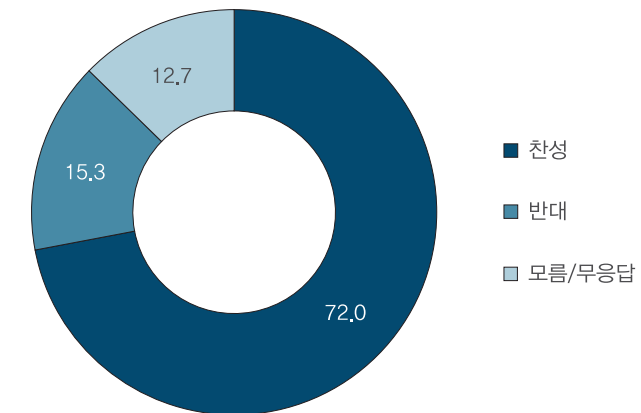
[그림 10]에 제시된 10월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인 중 다수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의견을 유보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의 45.0%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찬성은 31.5%로 반대 23.5%보다 높았다. 아시안게임 직후 성사된 고위급회담 이후 5.24 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대조적이다. 5.24 조치가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이슈였지만, 절반에 가까운 한국인은 이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금강산 관광 재개

17.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9월 4~6일, 10월 6~8일)

는 과반이 넘는 63.1%가 찬성했고, 반대는 24.0%에 그쳤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분야는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다수의 한국인은 당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봤다. 북한의 경제지원 요구가 있더라도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2.0%로 나타났다. 반대는 15.3%였다.¹⁸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은 사안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비정치분야 협력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그림 11] 북한의 경제지원 요구를 가정한 이산가족 상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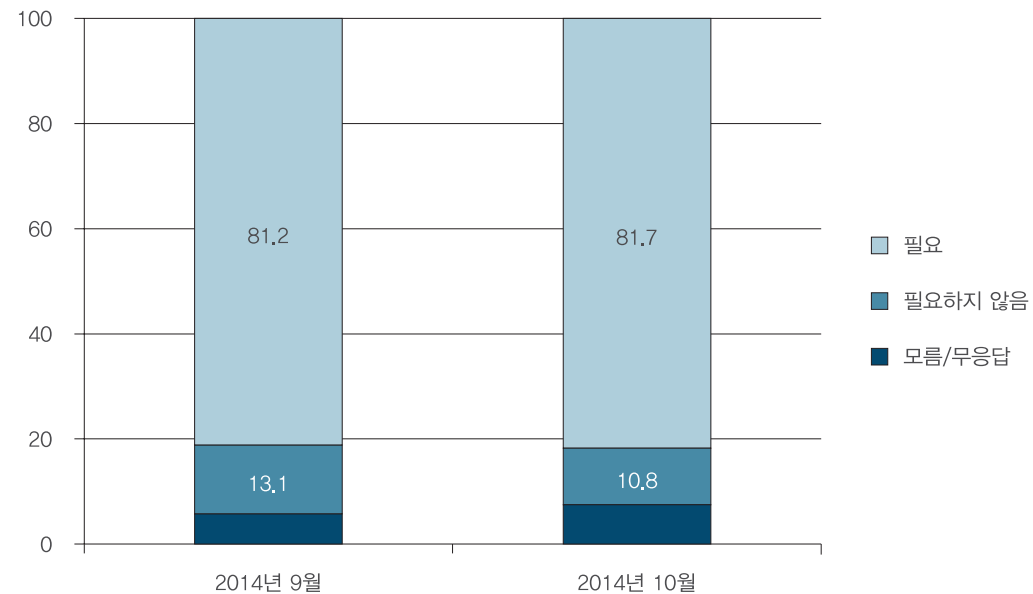
(3)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앞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결과는 9월과 10월 조사에서 동일했고,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는 세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높았다.¹⁹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 학계의 요구 역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10월 6~9일)

19.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9월 4~6일, 10월 6~8일)

[그림 12]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단위: %)



3. 한국인의 통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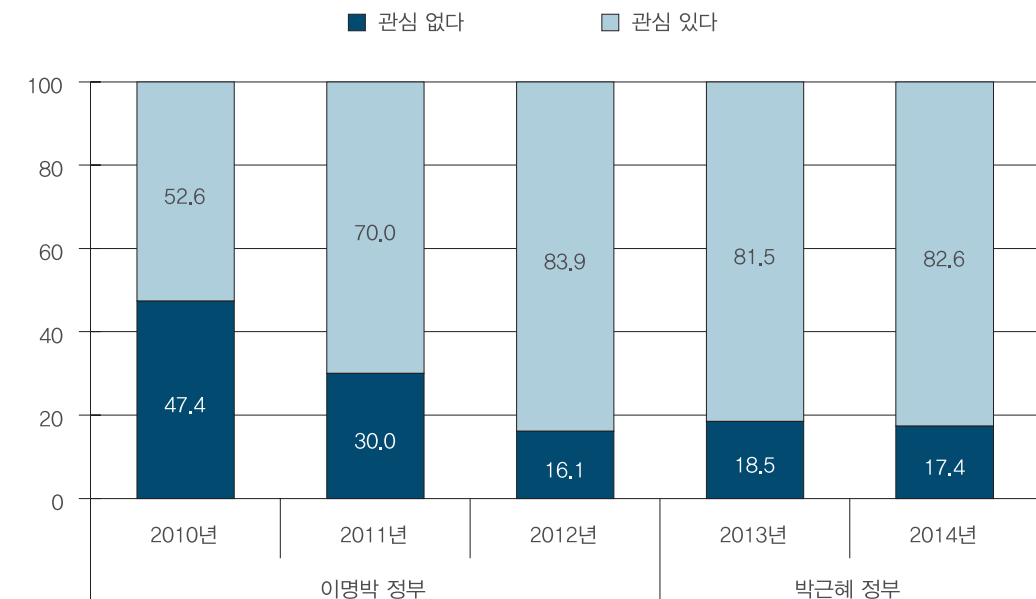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초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정책 변화를 시사했고, 3월 드레스덴 선언과 7월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으로 통일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여론을 어느 정도 정책에 수렴할 필요가 있다.

(1) 통일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그 동안 통일은 전쟁, 이산가족 등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분단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에도,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늘고 있다.

2010년 “통일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6%에서 점차 증가해 올해 82.6%를 기록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규범적으로 바람직(socially desirable)하게 여겨지기 때문인지 다수의 한국인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²⁰ 그러나 이것이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²¹ 통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림 13] 통일에 대한 관심²² (단위: %)

20. 2010년 천안함 사건(3월)과 연평도 포격(11월) 등의 직접적 군사도발은 한국인의 통일문제 관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두 차례 군사적 위협으로 악화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을 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2010년 52.6%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1년에는 70.0%까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력충돌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차츰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1.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과반이 넘는 한국인(53.9%)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5%였고, 모름/무응답은 18.6%였다. 출처: 아산데일리폴(2014년 3월 29~31일)

22. 출처: 아산연례조사(2010~2014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일의식조사 2009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 관심도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0년 이후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에서 항상 높았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2010년에는 무려 60.8%의 20대가 통일에 관심 없다고 응답했다. 2014년의 경우에도 20대 중 28.2%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50대(10.1%), 60세 이상(8.3%)과 비교했을 때 3배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비율이다. 2010년 군사도발을 직접 목격하며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2011년 이후 대폭 줄었지만, 20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지속되고 있었다.²³

[표 1] 세대별 통일에 대한 무관심²⁴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47.4	30.0	16.0	18.5	17.4
20대	60.8	35.6	22.9	27.6	28.2
30대	49.5	33.4	18.2	24.2	24.2
40대	43.0	22.8	16.0	12.8	18.3
50대	42.0	27.8	12.8	14.7	10.1
60세 이상	41.7	31.4	11.1	14.6	8.3

(2) 통일에 대한 접근법: 민족의식 대(對) 경제효과²⁵

표면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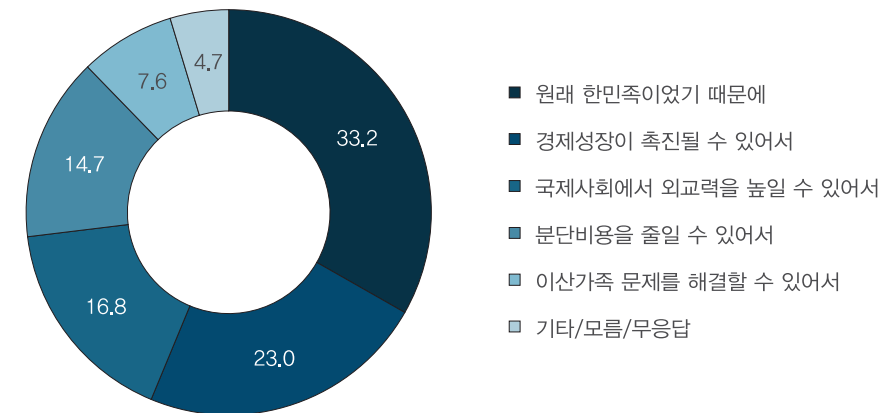
23. 북한의 군사도발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인은 북한 문제(예: 통일, 북핵 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관심 즉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와 통일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대감이나 무관심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통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을 세대별로 표시했다. 올해 세대별로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답한 비율을 2010년과 비교해 보면, 32.6% 감소한 20대뿐만 아니라 50대(31.9% 감소), 60세 이상(33.4% 감소)도 무관심이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통일에 대해 가장 무관심한 세대는 맞지만, 최근 관심도 개선 수준은 50대, 60세 이상과 비슷했다.

장 큰 원동력은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에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많았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라고 답한 비율도 7.6%였다([그림 14] 참조).

그러나 경제적 편익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3.0%가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국방비 등 분단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4.7%나 되었다. ‘경제 성장 촉진’과 ‘분단비용 절감’을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로 본다면, 통일을 경제효과 관점에서 본 시각이 37.7%(경제성장, 분단비용 감축)로 민족의식의 관점에서 본 40.8%(같은 민족 33.2%, 이산가족문제 해결 7.6%)에 근접했다.²⁶

[그림 14] 통일이 필요한 이유²⁷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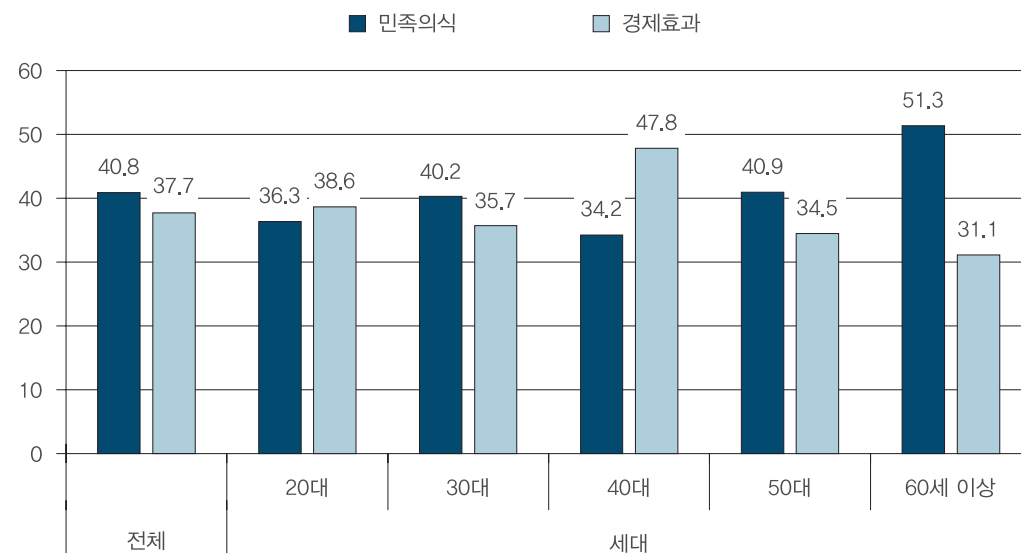
25.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표본(n= 866명)에게 그 이유를 묻은 질문을 분석에 이용했다.

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 일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7.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9월 4~6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민족의식’과 ‘경제효과’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분석했다.²⁸ 위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는 민족의식,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서”와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는 경제효과로 구분했다. 경제적 접근이 가장 두드러졌던 세대는 40대(47.8%)였다. 40대는 경제에서 중추역할을 하는 세대인 만큼 전반적으로 경제이슈에 민감했는데, 통일에서도 이들은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20대(38.6%), 30대(35.7%)의 순이었다. 이와 달리, 50대나 60세 이상은 여전히 통일을 민족의식 관점으로 접근했다. 50대의 40.9%, 60세 이상의 51.3%가 민족의식을 근거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쟁, 이산가족 등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에서 민족애를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 15] 통일이 필요한 이유: 민족의식 대(對) 경제효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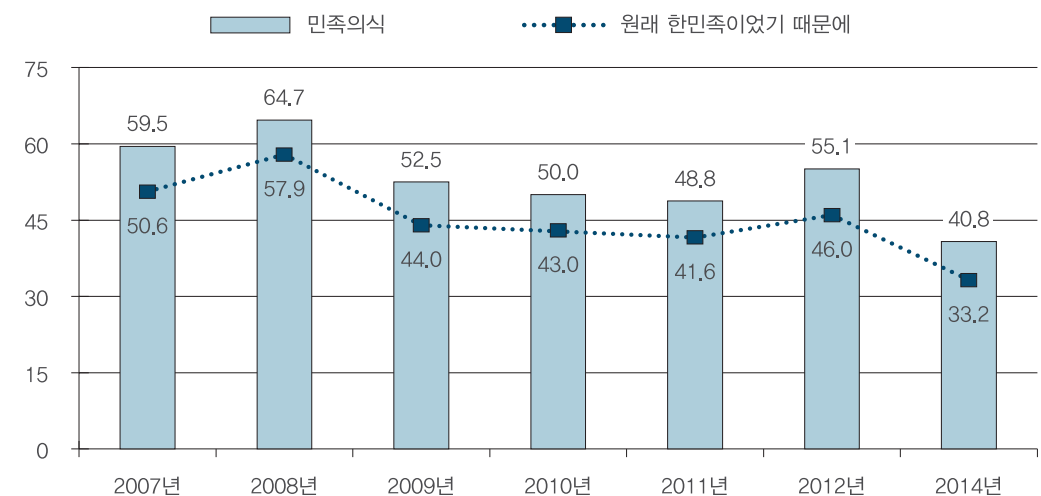


28.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9월 4~6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866명의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문항의 응답은 ①원래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②국제사회에서 외교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③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④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⑤국방비 등 분담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족의식, 경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①+④= 민족의식”, “③+⑤= 경제효과”로 계산했고, ②은 기타로 분류했다.

(3) 통일에 대한 민족의식 약화: 시기별 변화

통일에 대한 경제적 접근이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신에 분단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민족애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고, 비용과 혜택의 실용적 측면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2007~2014년 민족의식 관점에서 통일돼야 한다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 변화가 그 근거다([그림 16] 참조).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의식에서 찾은 한국인의 비율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2007년 59.5%, 2008년 64.7%로 과반 이상의 한국인이 민족의식을 근거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과 달리, 2014년에는 40.8%만 민족의식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다.²⁹

[그림 16] 시기별 민족의식 관점에서의 통일 필요성³⁰ (단위: %)



29. [그림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북한이 원래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만 놓고 보더라도 2008년 57.9%에서 2014년 33.2%로 6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3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은 문항과 아산데일리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답하게 한 문항을 분석에 이용했다. 설문에서 질문 위당은 다소 달랐지만, 민족의식에 해당하는 ①한민족이기 때문에, ②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지는 동일했다.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통일의식조사 2007~2012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2014년 9월 4~6일)

민족의식을 근거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의 세대간 격차를 분석했다. 2014년 40대를 제외하면, 20대는 민족의식을 근거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표 2] 참조). 통일에 대한 접근법에서 드러난 세대간 차이에서 눈 여겨 볼 변화는 40대 이상에서도 민족의식이 급격하게 약화된 점(40대: 22.2% 하락)이다. 젊은 세대의 민족에 약화가 분단에 대한 기억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더라도, 전쟁과 분단을 직접 경험한 50~60세 이상에서 통일을 민족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약화된 점(하락폭 50대: 31.8%, 60세 이상: 24.0%)은 유의할 만하다. 이처럼 전 세대에서 나타난 민족의식의 약화는 분단의 고착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2] 세대별 통일이 필요한 이유: 민족의식³¹ (단위: %)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전체	59.5	50.0	48.8	55.1	40.8
20대	51.0	40.6	37.8	46.3	36.3
30대	58.3	46.2	47.6	52.8	40.2
40대	56.4	53.4	47.7	52.1	34.2
50대	72.7	58.5	58.4	62.5	40.9
60세 이상	75.3	65.9	61.5	73.7	51.3

(4) 통일에 대한 우려: 경제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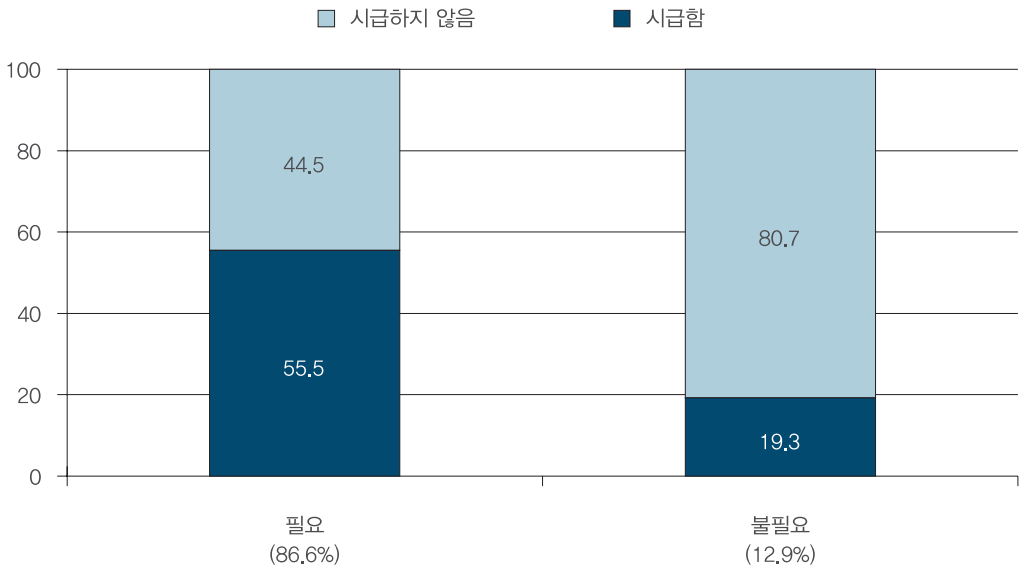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나눠서 살펴본 결과는 이와 달랐다. 대다수의 한국인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통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한국인은 16.0%에 그쳤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한국인 중 다수는 통일이 가능한 빨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70.6%)고 봤다.

31. 2008~2009년 자료는 원자료에 연령(개방형)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세대 구분(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 달라서 분석에서 제외했다. [표 2]에는 민족의식을 통일의 근거로 답한 비율(%)만 제시했다.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통일을 빨리 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 45.5%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통일이 시급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3.9%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이 86.6%였지만 막상 돈이 들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의견을 바꾼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 중에서도 44.5%가 경제가 나빠지면 통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즉 평소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경제가 나빠지면 통일이 시급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 경향은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수록 뚜렷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 사이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통일이 시급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0.7%나 되었다. 통일 이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7] 통일의 시급성³² (단위: %)



통일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접근법은 통일세에 대한 의견에도 반영된다.³³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48.1%

32.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9월 4~6일)

가 찬성했고, 40.8%는 반대했다. 모름/무응답으로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1.0%였다. 지난해 8월 복지증세에 대한 의견이 찬성 44.4%, 반대 51.6%로 반대가 높았던 점(모름/무응답 4.0%)을 감안하면, 통일세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국인이 86.6%였던 것에 비하면 통일세 부담에 찬성한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한국인도 일단 통일세 같은 경제적 부담이 더해질 경우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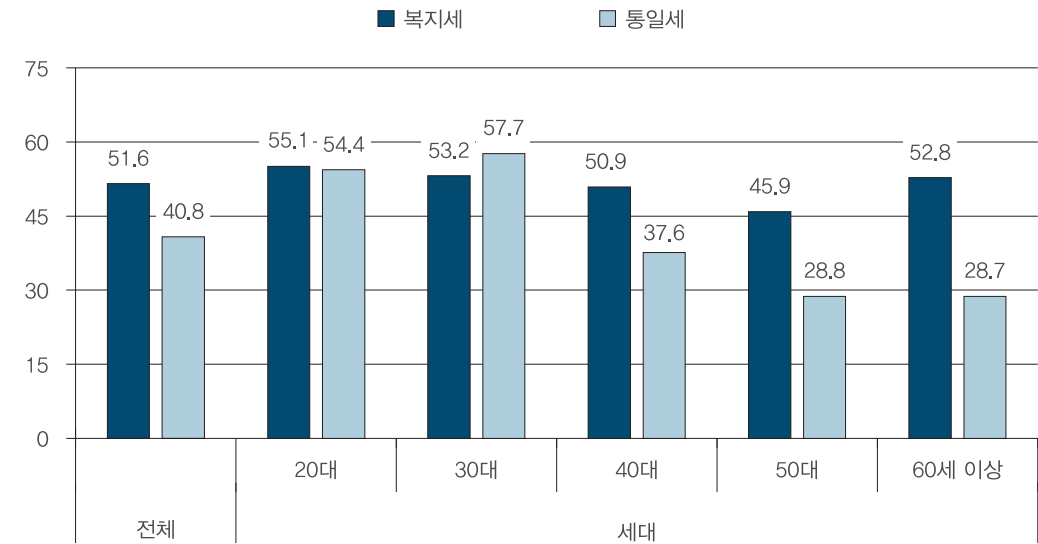
통일세에 대한 의견에서도 세대별 격차는 발견되었다. 통일세 부담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문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한 의견과 비교한 결과, 통일 및 복지세에 대한 의견은 세대별로 엇갈렸다.³⁴ 20~30대가 통일세, 복지세 추가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40대 이상은 통일세에 대한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저항이 높았던 젊은 세대와 대조적으로 50대와 60세 이상은 약 29%만 통일세에 반대했다.³⁵ 50대와 60세 이상이 복지증세를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각각 45.9%, 52.8%였던 것과 비교하면, 통일세에 반대하는 의견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통일이 향후 상당 기간에 거쳐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있는 젊은 세대에서 통일세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할 점이다.

33. 한반도 통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비용과 혜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비용 추정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추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통일 시기가 미뤄질 수록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34. 아산데일리풀(조사기간: 복지세 2013년 8월 12~14일, 통일세 2014년 9월 4~6일)

35. 50대, 60세 이상에서 통일세 부담에 대한 거부감은 각각 28.8%, 28.7%로 가장 낮았지만, 찬성 의견은 50대 63.8%, 60세 이상 49.4%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60세 이상이 통일세 문항에 모름/무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22.0%나 되었고, 50대는 7.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림 18] 증세에 대한 의견: 조세저항³⁶ (단위: %)



나가며

한국인에게 북한은 부정적인 존재이다. 40% 가깝게 북한과 안보위협을 직결시켰고, 북한을 전쟁이나 핵무기, 미사일 등과 연관 짓고 있었다. 특히, 젊은 층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심지어 북한 주민을 미국인이나 중국인보다 멀게 느꼈다. 북한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통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 80%가 넘는 국민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가능하면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국민은 20%가 안 된다. 70%는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늘었고, 상당수는 통일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했다.

흥미로운 점은 50대나 60세 이상에서도 통일을 민족의식 관점(민족동질성 회복)에서

36. [그림 18]에 제시된 증세에 대한 의견(%)은 복지세를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과 통일을 위한 추가 세금에 반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는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통일을 민족 관점에서 본 시각이 노년층에서도 크게 약해졌다(하락폭 50대: 31.8%, 60세 이상: 24.0%). 이러한 인식 변화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당위적으로 강조한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정부는 민족의식에 기대지 말고, 다수의 한국인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강조한 ‘통일대박론’은 상징적으로 좋은 출발일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동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 담론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론의 통일 전망은 회의적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 중 다수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지 않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단기적 관심을 높인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지난 7월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모아지는 이유다.

출범 2년 차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만큼 정치·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로 이끌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80%가 넘는 한국인이 답답한 남북관계를 풀 계기를 정상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통일, 북핵, 북한인권 등의 남북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이 정상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록

남북관계 주요 이슈

2013년

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

3월 8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3월 21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북한 인권침해 규탄, 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등)

5월 8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5월 18~20일: 북, 단거리 발사체 5기 발사

6월 7~8일: 중미정상회담

6월 27일: 한중정상회담

7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10월 7일: APEC에서 한중정상회담

10월 8일: 박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

12월 12일: 북, 장성택 처형

2014년

2월 17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

2월 20~25일: 이산가족 상봉

2월 21일: 북,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2월 27일: 북,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3월 2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
 3월 26일: 한독정상회담(통독경험 공유 합의)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 발표)
 3월 31일: 북, 서해 해상 사격훈련 실시

4월 17일: 유엔안보리, 북 정권의 반 인권 범죄와 대책관련 회의 개최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북한·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 확인)

5월 8일: 국방부, 북한 소형 무인기 관련 조사결과 발표
 (북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 제시)
 5월 20일: 해군,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에 경고사격 실시
 5월 28일: 박 대통령 WSJ 인터뷰 (북 4차 핵실험 위협 관련 ‘주변국에 독자적 핵무장
 명분 제공으로 인한 핵 도미노 효과’에 대한 우려 표명)
 5월 30일: 박 대통령, 커비 전(前) 북한인권조사위원회장 접견

6월 26일: 북,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3기 발사
 6월 29일: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7월 2일: 북,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2기 발사
 7월 3일: 한중정상회담 개최
 (한반도·동북아 정세 쌍방 관심사항 등을 논의, 「공동성명」 채택)
 7월 7일: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 6.15·10.4 선언 등 남북 합의 존중·이행 등 주장,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을 발표
 7월 9일: 북,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7월 13일: 북,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7월 14일: 북, 고성 인근에서 방사포 및 해안포 100여발 동해로 발사
 7월 26일: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7월 30일: 북, 묘향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 발사

8월 7일: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9월 1일: 북,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 동해상으로 발사
 9월 6일: 북,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
 9월 11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북 선수단 선발대(94명) 방남
 9월 19일: 북,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9월 24일: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북핵, 인권문제 등 언급)
 9월 28일: 북, 리수용 외무상 UN총회 연설
 (핵 보유 입장 재강조,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 비난, 연방제 통일방안 등 주장)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에 맞춰 남북고위급회담(2차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10월 10일: 연천에서 대북전단 살포, 남북간 총격전 발생
 10월 13일: 박 대통령,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10월 15일: 정부, 북한에 30일 2차 고위급 접촉 제안
 10월 30일: 2차 남북고위급회담 무산

조사개요

아산연례조사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일~9월 27일

2014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9월 1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아산데일리폴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ASAN REPORT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 변화

발행일 2015년 1월

지은이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110-062)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087-7 93300 비매품



9 791155 700877 비매품
ISBN 979-11-5570-087-7